광주 · 대전경찰청 신설

- 지역치안역량 대폭강화 · 책임 치안행정 토대 마련 -

정부가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키로 확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역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책임치안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개 지방경찰청의 신설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만 독립된 지방경찰청이 없고, 지난해 두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서울·경기청에 이어 3~4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의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광주경찰청 신설은 전남도청이 지난해 11월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여 치안·일반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고, 대전경찰청의 신설 역시, 오는 2012년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 확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충남지역의 가파른 치안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전지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방청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2개 지역의 치안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 광주광역시에서만 총범죄 6만 2천 738건, 교통사고 1만 4천 135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역시 총범죄 발생 5만 1천 163건에 교통사고가 5천 33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81년 대구경찰청 개청당시 총범죄 발생 3만 1천 792건, 교통사고 7천 112건의 2배 수준이고, '84년 인천경찰청 개청당시 범죄발생 2만 5천 452건에 교통사고 9천 972건, '99년 개청된 울산경찰청의 현재 치안수요인 총범죄 3만 6천 529건, 교통사고 7천 325건을 상회하는 등 치안수요의 과중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경찰청 신설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내년에 2개 지방청의 동시 개청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됨에 따라 지역 책임치안체제 및 지방 경찰청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물론 지방경찰청간 치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봉사치안의 토대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광주·대전광역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씩 각각 낮아지게 되는 등 주요 치안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도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광주·대전 지방경찰청 신설과 관련 열린 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대전경찰청은 청.차장과 6과 3 담당관의 정원 202명 규모로 개청에 필요한 예산은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건물을 임차해 임시 개청한 뒤 오는 2009년 충남경찰청 신청사 완공시 대전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도 같은 규모(230명, 예산 99억원 규모)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경찰청을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현재 서울·경기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나머지 11개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경찰청만 경무관으로 보하고 있어 그동안 청장의 직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는 영원한 경찰 同志

- 이택순 경찰청장 · 권동옥 해양경찰청장 환담 -

이택순 경찰청장과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9월 28일 경찰청 혁신회의실에서 환담을 갖고 상호 우호교류 및 업무협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권 해경청장의 인사차 방문으로 이뤄진 만남을 통해 두 청장은 육지와 바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책임자로서 영원한 동지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심 집회 · 행진 엄격히 관리

- 경찰청,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키로 -

앞으로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나 거리행진이 금지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도심 집회와 거리행진을 엄격히 관리하는 '집회·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최근 주말마다 시위대로 인해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해져 시민 불편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신고가 사전에 들어오더라도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적법 집회시에도 시위대가 집회 및 행진시 신고된 車路를 벗어나 거리행진을 하면 1차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신고 車路 내로 밀어넣어 소통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조치가 어려운 대규모 시위일 경우 철저히 채증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차량 벽에 낙서를 하거나 진압경찰을 자극하는 행위 등 경미한 불법행위도 현장에서 검거해 즉심에 회부하는 등 사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위대가 경미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훈방하는 관행 때문에 불법심리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면서 『앞으로 불법 집회·시위에 검거전담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현장 검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

〈1면에 이어〉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구조를 바탕으로 한다면, '검사는 수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판정에서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최근 발언은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는 TV 프로그램인 'CSI 마이애미'가 방영된 후에 검찰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위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심원들이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조직을 보면 공판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형사부, 특수수사부 등에 주력하고 있고, 이도 모자라 검사 밑에 입회계장, 검사장 소속하에 수사관 등을 배치해서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공판업무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다보니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검사가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상이한 양형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찰은 공판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과 증거제시로 판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공소제기보다는 수사에 주력하여 서류재판과정으로 이어지는 좀 더 쉬운 길을 가려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조계 스스로 이제는 제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검찰은 공소제기를 통한 치열한 법정공방과 객관적 증거제시를,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CSI 마이애미'와 'CSI 뉴욕'이 오늘따라 왜 이리 그리운가?

경우신문 구독문의 02-2234-1881

참 봉사의 현장

방치된 국가 유공 경찰서장 墓 40년간 벌초 및 제사

- 전정택 제주참전경찰회장, 충혼묘지로 移葬 추진 -

독립 유공자이면서 제주지역에서 남다른 치안서비스를 펼쳐 지역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아 왔으나, 사망후 돌봐 주는 이가 없어 쓸쓸하게 방치된 어느 경찰서장의 묘를 40여년간 벌초와 제사를 지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老警友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다가 돌아가신 선배 경우를 보살피는 것은 살아있는 후배 경우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인 전정택 제주참전경찰유공자회 회장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한편 이 묘지의 주인인 故 문형순 경찰서장은 평안남도가 고향으로 해방전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후 귀국해 경찰에 투신했고, 제주 성산포경찰서장과 모슬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4.3사건때 큰 공을 세우는 한편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할 위험에 처한 양민 수백명의 목숨을 구해주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와 지역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사망후 친인척은 물론 후손이 없어 제주시 건입동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이후에도 돌보는 이가 없어 방치된 묘가 흉물스럽게 변하고 말았다.

평소 문 서장을 존경해 왔던 전정택 회장은 지난 74년 문 서장의 묘가 방치된데다 묘비 마저 두동강으로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보수하는 한편 지난 76년 4월부터는 오동동 소재 평안도 공동묘지로 이장해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고, 특히 지난 해에는 뜻있는 마을주민들과 합동으로 공적비까지 건립해 줌으로서 故人의 덕과 은공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전 회장은 이제 자신이 年老하여 사망할 경우 문 서장의 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2003년부터 제주시 충혼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독립유공자로서 대통령 포상이 있어야 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렵게 서류를 구비해 지난 8월 제주보훈청에 포상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제주도민에게 큰 은덕을 베푼 문 서장님을 사후에라도 돌 볼 수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게 공격당해 쓰러지는 초라한 경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06년 10월 10일

大 韓 民 國 在 鄕 警 友 會